광주 꿈드리미 카드 '카드깡' 등 곳곳서 악용

市교육청, 작년 첫 시행…대상 확대

일부 학생들 물품 구매 뒤 중고거래

교육청 "부정사용 환수…감독 강화"

내년 전체 중·고생에 60만-100만원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경비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꿈드리미 카드'가 카드깡 등으로 악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최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꿈드리미 카드로 구입한 에어팟프로 2세대를 판매한다는 글 등.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경비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꿈드리미 카드'가 카드깡 등으로 악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꿈드리미 카드'로 고가의 상품을 구입한 뒤 현금으로 교환하는 속칭 '카드깡'을 하거나 취지와 거리가 먼 상품을 구매하는 악용 의심 사례 9건을 적발했다.

최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꿈드리미 카드로 구입한 36만원 상당의 에어팟프로 2세대를 24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학부모 커뮤니티(맘카페)에서는 학부모 개인용도의 안경·렌즈, 소설책, 가습기, 마사지건, 종이컵 등 교육 목적과 무관한 물품을 구매한 정황도 발견됐다.

바우처 사용기한인 2026년 2월 말을 고려해 선결제 후 포인트 적립 방식을 공유하기도 했다.

포털 게시판에는 꿈드리미 카드로 아이돌 앨범, 피규어, 온라인게임 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글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꿈드리미 바우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단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접수 건수가 5-10월 5건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꿈드리미 사업 예산은 첫 해인 2024년 203억원에서 2025년 374억원, 2026년 472억원으로 2년 만에 2.3배 증가했다. 처음에는 다자녀·저소득층 등 선별적 복지 대상 중 중3·고3만을 대상으로 했다가 2025년 중2-3, 고2-3년으로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전체 중·고등학생 8만4천953명을 대상으로 중학생 6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꿈드리미 사업을 교육청 직원 2명이 지도·감독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보편적 교육복지를 늘리려는 의지는 격려받아야 하지만, 악용 사례를 차단하고 소중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와 차단 조치를 우선 적용하고 있다. 또 고의·상습적인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환수에 나설 것"이라며 "꿈드리미 오남용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북구청 신관 공사…'거동 불편' 민원인들 '발 동동'

지난 11일부터 본관 연결 복도 설치 중

청사 유일 엘리베이터 입구 통행금지

휠체어 이용·고령자·택배기사 등 진땀

광주 북구청 신관과 본관을 잇는 복도 설치 공사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출입구가 '대안 없이' 막히면서 거동이 힘든 민원인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북구청사 신관 연결복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공사는 신축 중인 신관과 기존의 본관을 연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이로 인해 공사 범위에 포함되는 구간 일부는 안전상의 이유로 통행이 금지됐다.

문제는 통행 금지된 곳에 북구청사 내 한 대 뿐인 엘리베이터가 있으나, 바로 앞 출입구가 폐쇄되면서 이를 이용하려면 다른 곳으로 들어가 공사 구간까지 다시 와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인들은 큰 어려움이 없겠으나 노약자의 경우 불편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출입구 자체가 막히면서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2층 이상으론 다닐 수 없게 됐다.

택배와 음식 배달 등을 위해 북구청을 찾은 이들 역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날 오전 북구청사를 찾은 한 택배 기사는 "오늘은 전달할 게 그리 많지 않아 괜찮지만, 지난 주 물품이 몰렸을 땐 진땀을 뺐다"며 "잠깐의 불편이라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건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밝혔다.

폐쇄 조치로 인한 이 같은 불편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지만, 북구가 공사 전 이를 미리 안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민원인 등에 대한 배려가 불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거동이 매우 불편한 민원인이 찾을 경우 담당 직원이 1층으로 내려와 업무를 돕고 있다"며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완전한 대처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29일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다음 주부턴 출입구를 다시 개방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찬웅 기자

한적한 도로 골라 교통사고 '짜고친' 배달기사들

피해자와 가해자 역할을 분담해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배달 업체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0대)씨 등 6명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목포시 일대에서 고의 사고를 내 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배달 대행 업체 동료 기사들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차량과 오토바이를 각각 몰다 한적한 도로에서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던 이들은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힌 사고 차량 사진에서 동일한 파손 흔적을 발견한 경찰의 추궁에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 외에도 경찰은 A씨 등이 보험금 지급일에 합의금을 분배한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해 혐의를 입증했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교통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보험의 본래 목적을 퇴색시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재영 기자

'尹·국힘 비판' 집회 등 참여 교사 2심서 '무죄'

법원 "개인으로서 자유 보장돼야"

민변 "문제 제기 민주주의 동력"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비방하는 목적의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형을 받은 백금렬(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는 교사 신분이었던 지난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와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집회·시위에 참여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의미가 담긴 노래를 부르거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참여한 집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과 정부를 비판하는 성격이었다. 소리꾼이기도 한 백씨는 무대에 올라 개사한 노래를 부르며 뜻을 함께했다.

검찰은 백씨가 공무원 신분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을 공개 비판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사회 상규를 고려하더라도 백씨의 행위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직 수행에 연관 없거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가급적 보장돼야 한다"며 "당적을 가진 이에 대한 지지 또는 비판이 그가 속한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백씨는 "이런 일로 불이익을 받은 마지막 사례로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것 같다"고 감회를 밝혔다. 백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도 성명을 통해 "시민들의 비판과 문제 제기는 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동력"이라며 "교원도 업무 시간과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선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영 기자

전남경찰, '좌초 여객선' 악플 수사

최근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와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조치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퀸제누비아2호 사고와 관련한 악성 댓글을 모니터링한 결과 언론사 유튜브 영상에 탑승객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확인해서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일부 누리꾼이 '좌파 공작' 등 근거 없는 댓글을 달며 탑승객과 지역을 비하한 것으로 알려졌고, 형사 처벌이 가능할 정도의 악성 댓글은 현재까지 1건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댓글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해 조만간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안재영 기자